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국무총리〉

소추안 151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관련 “문제 없어”
“재판관 임명 거부는 의무 위반… 중대 사항은 아냐”
韓, 직무 복귀 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다시 수행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도 다시 맡게 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의 법 위반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야 5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보·목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 이유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과 인용 의견을 낸 1명은 위헌 행위라는 입장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기각)·정계선(인용) 재판관은 “(임명) 거부

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고 뜻을 달리했다.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고 뜻을 달리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 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한 점도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한 총리가 복귀함에 따라 3개월여 이어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됐다.

한 총리는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이

동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오는 4월 2일 발표 예정인 ‘더티 15’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가 직접 대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의 복귀로 국정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정치적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외교 전문가인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로 인해 그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외교적 공백 상태가 다소 해소되어 임시적이거나 외교적 위상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대외 외교문제에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아무 구심점 없이 대한민국이 외교 공백상태로 있었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통상 분야 등 산적한 현안에 있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경제에 청신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재생에너지 활용·RE100 산단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 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안호영 의원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농협중앙회 본사, 농도 전북으로 이전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미래농업 선도 가능성 갖춰… 본사 이전 최적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남원1, 사진)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동조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農道)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기, 지방소멸위기 등 다중위기 상황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본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인구정책 콘텐츠, 도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찾는다

도, 내달부터 5월 9일까지 공모전…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와 전북형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30~60초)과 그래픽 디자인(포스터·웹 배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북 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전북형 저출생 정책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거나, 정책이 도민의 실제 삶에 가져온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창의성과 활용성을 기준으로 총 8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 120만원, 우수상(2명) 80만원·60만원, 장려상(5

명) 40만원·20만원 등 총 4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7월중 공고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juhoo2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금길



10th

아워오션 콘퍼런스



— OUR OCEAN, OUR ACTION —

2025년 4월 28일-30일 부산 벡스코